

주간조선

weekly.chosun.com | 2003.12.4 | 1781호

신인류 이영애 "저도 대장금 팬이에요"

노무현·강금원

그 수상한 관계

‘현정권의 주주’ ‘민정수석 퇴진’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는 강씨를 왜 대통령은 감싸고 있을까



- 이슈
- 대표경선 민주당 조순형의원
- ‘아름다운 가게’ 박원순 상임이사
- 사진집 낸 히피가수 한대수

- 불안주민들 ‘험악한’ 긴장
- 지구촌 반부시 열풍의 진상



지난 11월 12일 오후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앞은 출국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늑대가 나타났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은 작년까지 16차례나 유아무야를 반복했다. 대부분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떠올리며 가볍게 여기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 · 사회학(dhseol@korea.com)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오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무렵이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발전된 한국 경제의 상징

이라며 은근히 자랑스러워했다. 정부 역시 외국인 노동자를 3D직종 취업기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워주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당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수입하느냐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간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스스로 한국에 찾아와 노동시장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으니, 그들을

단속하여 추방하기보다는 묵인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묵인하는 이러한 정책기조는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1992년 봄, 파키스탄 노동자들끼리 서울·경기도를 오가며 집단적으로 살인을 벌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국민 노동자들을 국내 기업에 취직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두 집단이 영역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연쇄 보복 살인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정부는 19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

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 기간에 신고한 외국인은 총 6만1126명이었고 사용자는 1만796명이었다.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자진신고한 외국인 노동자와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제받았다.

제조업에 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사용자 책임하에 1992년 연말까지 제1차로 체류 연장을 허가받았다. 불법체류자를 대거 강제 출국시킬 경우 발생할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유사합법화’ 혹은 ‘시한부 합법화’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은 지속되었고, 대안적 인력 확보 방안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1993년 6월 30일까지 재차 출국기한 연장 조치를 내렸다. 1993년 6월에는 다시 그 해 연말까지 출국 기한을 세 번째로 연기하였으며 다시 1994년 5월 31일까지 네 번째로 연기하였다.

1993년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에 취업 중인 불법체류자를 전원 합법취업자로 바꿀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2년 자진신고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인원만큼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이 중소기업에 배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총원 실무를 '산업체 유관 공공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임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내 불법체류자의 임금 수준의 절반을 밑도는 낮은 임금으로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여, 국내 중소기업에 배정하였다.

그런데 차별적 저임금에 불만을 품은 산업연수생은 대거 지정된 사업체를 이탈하였다. 산업연수생이 사업체를 이탈하면 '자격 외 취업자'가 되어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즉 불법체류자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산업연수제도도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하였다.

산업연수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도 관광객 또는 친지 방문자의 형태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착하여 취업하는 불법체류자 유입 관행은 지속되었다. 정부는 1992년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처를 처음 받은 이후 거의 매년 한두 차례씩 자진출국 시한을 정하고 그 후 일제단속 방침을 밝히다가 정작 그 날이 오면 생산현장의 인력난을 이유로 그냥 넘어갔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공급과 외국인 불법체류자 축출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였는데, 불법체류자 추방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요구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경기가 좋는데 돌아가는 기계를 세울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을 펼칠 때에도 제조업 취업자는 예외로 삼았다.

이러한 일이 작년까지 벌써 16차례나 반복되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고함을 질렀던 양치기 소년의 우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일제단속을 연례행사 정도로 가볍게 여길 정도가 되었다.

지난 8월 16일 국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국내 기업에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인권침해·송출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고용허가제 실시의 준비 단계로, 정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7번째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를 접수받았고, 11월 16일부터 단속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자진신고 후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불법취업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법적 자격을 갖춘 진짜 '근로자'가 되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생긴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단추를 풀고 다시 첫 단추부터 끼우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이번 자진신고와 일제단속은 과거의 것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과거와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었다. 첫째, 정부는 11월 16일이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일제단속 시작 시점을 17일 월요일로 고쳐 설정하였다. 요일이 단속이 임박하여 바뀐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둘째,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여 대거 추방할 경우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한다고 불멘소리를 하자 단속 첫날 아침 정부는 공장에서 일하는 불법취업자는 봐준다고 발표하였다. 셋째, 불법체류로 추방 위기에 내몰린 중국 동포들이 '국적회복신청'을 하고 집단적 단식농성을 강행하자, 정부는 법률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 동포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넷째,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외국인 보호시설 부족 때문에 정부가 하루 단속 인원을 500명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별 다른 준비 없이 큰 소리만 치다가 정작 상황이 닥치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다. 여럿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기만 하면 정부는 임시방편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이처럼 무원칙적인 정책 운영에 손해를 보는 것은 "순진하게 정부 말을 들은 사

람"들이다.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한국의 상식이 다시 입증되었다.

정부는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단속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단속 대상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차이가 있어 제조업 외 다른 업종부터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주권국가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야 하나,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봐주는 관행이 오래 지속되다보니, 출입국관리 당국이 본분의 모습을 찾는 게 어려워졌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조업체에 취업 중인 불법체류자에게 단속을 유예하는 특혜를 베풀려면, 대상자와 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것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귀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딱한 처지를 고려하여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 동포들에게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다고 약속해야 한다. 또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불법체류자가 아닌 신분으로 입국하여, 국적 취득을 신청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지난 자진출국 기간을 지나쳤더라도,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재입국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 정부가 중국 동포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배려를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그것을 거부하

고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온정적 조치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공표해야 한다.

'양치기 소년'이 마을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거짓말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한다는 점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어렵게 도입한 고용허가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하는 재난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첫날인 지난 11월 17일 오후 합동 단속반원들이 서울 오류동 일대 여관촌에 불법 취업한 사람들의 숙소로 보이는 곳을 뒤지고 있다.

